

모꼬지

▶ 정창경, 이상훈(연세대학교)

우리 동네를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를 잡아라!



리포트

“OO 엑스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이름일까?”

영 상

엑스포라는 명칭,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가능한가?



각오한마디!

저희는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정창경, 이상훈입니다. 인터넷 매체가 등장한 이후 다양한 주장과 사실이 범람하며, 무엇이 진실이냐를 논의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언론인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팩트를 알리는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팩트체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시기에 주제의 선정부터 검증까지 팩트체크 전 과정을 경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이번 공모전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희 팀의 이름은 ‘모꼬지’입니다. 모꼬지는 ‘놀이, 잔치’라는 뜻의 순우리말인데, 저희 조가 다루는 주제가 지역 축제, 엑스포라는 점에 착안해 1차적으로 팀 이름을 정했습니다. 더불어 사람들이 ‘팩트체크’라는 표현을 들으면 막연한 정치적 수사, ‘나와는 상관없는 일’ 정도로 치부하는 일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팩트체크라는 이름에 갖는 거리감을 줄이고, 팩트체크가 사람들 곁에 가깝게 다가가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최종적으로 저희 조의 이름을 모꼬지로 짓게 됐습니다.

팩트체크 리포트

"OO 엑스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이름일까?"

팩트체크 계획 수립하기

➔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올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화두의 하나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World Expo) 유치전'이었다. 개최 후보지로 선정된 부산을 필두로 "부산에 유치해", "Busan is Ready!" 등 홍보전을 펼쳤다. 우리 정부와 국회도 해외 외교 순방 및 정상회담에서 엑스포 유치를 언급하는 등, 엑스포는 어느새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부산 엑스포의 유치 양상을 지켜보던 중, '하동세계차엑스포'와 '보성세계차엑스포'의 홍보물을 보게 됐다. 한창 부산 엑스포로 떠들썩할 때,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하동과 보성의 세계차엑스포를 보고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다. "이름은 다 같은 엑스포인데, 대체 뭐가 다른 거지?, '엑스포'라는 명칭이 자유롭게 쓰일 수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 곳곳에서 열리는 여러 엑스포 간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자체들이 국제행사에 'OO 엑스포'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 팩트체크 방법에 대한 계획

1. 문헌 조사

(1) 인터넷 자료 조사

- 국제박람회기구(BIE)의 웹사이트를 확인하여 엑스포 분류 기준을 검토
- 하동세계차엑스포 / 보성세계차엑스포 웹사이트를 확인하여 엑스포 개최계획, 중앙 정부 심사과정 등에 관한 보도자료, 계획서 있는지 확인
- 하동과 보성 외 기타 국내 지자체 국제행사, 엑스포 개최 사례 탐색
- 월드컵, 올림픽, 엑스포 등 글로벌 메가이벤트의 명칭 사용이 제한된 사례가 있는지 기사 탐색

(2) 관련 법령 조사

- BIE가 게재한 BIE 협약(BIE Convention) 원문 및 국문 번역본¹⁾ 검토를 통한 규정 확인
- 생활법령정보센터, 중앙정부 웹사이트 등을 확인하여 엑스포 등 국제행사 개최, 명칭 사용 등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검토

(3) 학술 자료

- 지역 엑스포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논문, 학술지 등을 통해 국제행사 개최가 지역의 사회, 문화, 관광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검토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작성한 '하동세계차엑스포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엑스포 종류 및 개요, 실제 지역 엑스포 유치 과정 및 운영 계획 등을 확인
- BIE 협약을 다루는 국제법 분야의 논문 탐색 ->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의 연구 의뢰로 2013년 작성된 「국제 박람회에 관한 협약」의 국내 이행과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 및 향후 대응 방안 검토' 보고서 확인

2. 인터뷰

(1) 관공서 인터뷰

- 지역 엑스포 행사를 진행하는 지자체와, 예산 지원 심사 및 국제행사 승인 주체인 중앙부처 두 가지로 나뉘어 진행

1) 외교부 조약정보 체계 https://www.mofa.go.kr/www/wpge/m_3835/contents.do

- 세계차엑스포 개최한 하동군청과 보성군청의 담당자 연락해서 인터뷰
 - > 보성군청 차원예유통과와 차산업팀에 연락해 보성세계차엑스포의 국제행사 승인 여부 묻고, 기본 계획서 등의 자료 받을 수 있는지 문의
 - > 하동군청 기획예산과에 연락해 '차산업 분야 정부승인 국제행사'라는 표현이 사실인지, 그리고 하동세계차엑스포가 국제행사 승인 받기 위해 외국인 이용객 수 등 조건은 어떻게 계산했는지 문의
- 기획재정부 문의
 - > 지자체 행사에 '엑스포' 명칭 사용 관련해서 이를 제한하거나 허용하는 기재부 규정은 없는지(과거 기재부 훈령에는 BIE 협약 위반되지 않도록, 필요시 엑스포 명칭 제한한다는 문구 있었음)
 - > 2023년 올해 예정된 정부승인 국제행사에는 무엇이 있는지

(2) 전문가 인터뷰

- 축제 기획 및 운영, 마케팅, 관광경영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BIE 협약의 해석을 도와줄 국제법 전문가 등 인터뷰
- 엑스포 자문, 컨설팅 등 실무 경험이 많은 국내 관광경영학 교수 탐색
 - >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 사무처장 및 오송바이오엑스포 위원장 등 역임한 신창열 박사 인터뷰
- 국제법(BIE Convention)의 국내 적용 및 사례 분석이 가능한 전문가 인터뷰
 - > 서울대학교 로스쿨 이재민 교수 인터뷰
 - 이재민 교수의 「국제 박람회에 관한 협약」의 국내이행과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 및 향후 대응 방안 검토'를 중심으로 BIE 협약의 적용 범위와 여부 문의
 - > 연세대학교 로스쿨 이기범 교수 인터뷰
 - 이재민 교수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해석이 통용될 수 있는지, 그 외의 법리적 쟁점이 존재하는지 문의하여 BIE 협약에 비추어 지역 엑스포의 명칭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 고려대학교 로스쿨 강병근 교수 인터뷰
 - 이재민 교수 및 이기범 교수의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이견이 없는지 교차검증

- 국제행사 분석 경험 많고 마케팅, 브랜딩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 탐색
 - > 관광 뉴스 온라인 매체 'WalkintoKorea' 강대훈 대표 인터뷰
- 인터뷰들을 통해 엑스포 명칭의 남용에 문제가 없는지, 지역 특색을 살리는 차별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전문가 의견 구하고자 함

(3) BIE 관계자 인터뷰

- BIE가 공지한 연락 채널(info@bie-paris.org)을 통한 서면 인터뷰
- BIE 총회의장 역임 중인 최재철 주프랑스대사 인터뷰
 - > BIE 측에서는 '엑스포'라는 명칭의 자유로운 사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별도의 명칭 제재 규정은 없는지 문의
 - > BIE는 올림픽, 월드컵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는데, BIE와 엑스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문의
 - > '엑스포'라는 명칭 사용이 BIE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지 문의

3. 현장 답사 및 일반인 대상 인식 조사

- 하동세계차엑스포에 직접 방문해서 지역 엑스포의 운영 방식 등 확인
- 엑스포가 타겟팅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엑스포 인식 조사 수행

체크해보기

문헌 조사

1. 인터넷 자료 조사

엑스포 관련 정보를 수합하기 위해 관련 웹사이트에서 자료 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전 세계의 박람회를 총괄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의 웹사이트를 확인했다. 해당 웹사이트를 토대로 BIE의 엑스포 분류 기준을 확인, 하동세계차엑스포나 보성세계차엑스포 같은 대다수의 지자체 국제행사가 BIE의 공인 엑스포에는 해당하지 않는, 비공인 엑스포임을 확인했다.²⁾

하동군에서는 하동세계차엑스포가 국내 최초의 차 산업 분야 ‘정부승인 국제행사’임을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공인한 바 있다.³⁾ 관련 정보 확인을 위해 정부의 보도자료와 언론자료, 하동세계차엑스포의 웹사이트를 조사했다.⁴⁾ 이와 함께 같은 이름으로 행사를 진행해 온 보성세계차엑스포의 웹사이트를 함께 참고했다.⁵⁾

이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문화행사 및 지역축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관광공사의 자체 웹사이트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축제 관련 정보를 확인했다.⁶⁾ 이를 통해 보성과 하동의 세계차엑스포의 전신인 ‘보성다향대축제’와 ‘하동야생차 문화축제’ 관련 정보를 얻었다. 두 행사 모두 엑스포 이전부터 지역축제로 개최되고 있었으며, 금년에는 각 지역의 ‘세계차엑스포’와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어

사실상 같은 행사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인 자료조사를 통해 ‘엑스포’라는 명칭이 제한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했다. ‘엑스포’, 혹은 ‘EXPO’라는 단어는 여러 지자체와 기업, 전시회 등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반면, 월드컵과 올림픽은 FIFA와 IOC의 승인을 받아야만 명칭 사용이 가능했다.⁷⁾ FIFA의 승인 없는 ‘월드컵’은 존재할 수 없지만, BIE의 승인이 없는 ‘엑스포’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찾던 중, 2009년 개최된 인천세계도시축전 관련 정보를 찾게 됐다. 인천세계도시축전은 당초 ‘인천세계도시엑스포’라는 명칭으로 개최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국 측에서 해당 주제와 명칭이 2010년 상하이 세계 엑스포의 주제인 ‘Better City, Better Life’와의 유사성을 이유로 항의했고, 이후 ‘인천세계도시축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⁸⁾ 해당 사례를 제외하면 BIE가 엑스포라는 명칭의 사용을 제한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2. 관련 법령 조사

올림픽과 월드컵은 IOC와 FIFA가 각각 독자적인 상표권을 가지고 있어 다른 단체에서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다. 본래 우리나라는 저명한 국제기구 및 타국의 명칭이나 표장 등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거부해왔지만, 2010년 1월 관련법이 개정되어 IOC는 올림픽의 상표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⁹⁾ 월드컵을 주관하는 FIFA도 같은 맥락에서 관련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¹⁰⁾ 반면, BIE는 엑스포의 명칭을 제한하는 뚜렷한 근거가 없었다. 엑스포의 운영과 개최 등을 규정한 BIE 협약¹¹⁾에는 명시적으로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부분이 없었다.

BIE 협약 2조는 a) exhibitions lasting less than three week(3주 미만의 박람회),

7) 이성훈, “올림픽 경기장에 ‘올림픽’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KBS, KBS 뉴스 웹사이트, 2017.06.28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506370>

8) 강남주, “인천 세계도시축전 명칭 변경”, 경인매일, 경인매일 웹사이트, 2008.04.14.

9) 오지윤, 조광민, 김홍렬, “IOC의 ‘올림픽’ 명칭에 대한 법률적 권리 연구”,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2014 No.19(4), 121-135.

10) 김은령, “‘월드컵-카타르2022 못써요’ e커머스 지재권 관리 강화”,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웹사이트, 2022.12.1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12112565726290>

11) BIE Convention * 참고한 BIE Convention 원문 자료는 첨부 파일로 제출

2) 국제박람회 기구 공식 웹사이트, <https://www.bie-paris.org/site/en/about-world-expos>

국제원예생산자협회 공식 웹사이트, <https://aiph.org/expos/categories/>

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5.4.,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267&call_from=rsslink

4) 하동세계차엑스포 공식 웹사이트, <https://www.hadongt.co.kr/teas/tea/expo/teaIndex>

5) 보성세계차엑스포 공식 웹사이트, <https://www.bsworldteaexpo.kr/>

6) 한국관광공사 공식 웹사이트, <https://korean.visitkorea.or.kr/kfes/main/main.do>

b) fine Arts exhibitions(순수 미술 박람회), c) exhibitions of an essentially commercial nature(완전히 상업적인 성격의 박람회)의 3가지에 대해서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해두었다.¹²⁾ 즉, BIE 2조에서 명시된 예외 사례에 대해서는 BIE가 협약을 근거로 명칭 사용 여부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해당 협약이 국제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특성상, 협약을 팩트체크의 근거 자료로 참고하되 조문의 자세한 해석은 국제법 전문가 교수분들에게 검증을 부탁했다.

명칭의 사용과 관련하여 국내법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도 살폈다.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비공인 엑스포’ 등을 포함한 ‘국제행사’의 유치와 지원, 승인 절차와 관련해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¹³⁾ 두 규정 모두, 전시산업발전법과 국제경기대회지원법 등 상위법에서 정하는 국제행사와 함께 소관 국제행사를 정의하고 있다. 문체부의 규정에 따르면, 문체부의 소관 분야는 ▲문화 ▲관광 ▲체육 분야의 국제 행사에 한정된다.¹⁴⁾

상업성이 강조되는 ‘엑스포’와 같은 국제행사 승인 여부는 기재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자체 규정과 「국제행사 관리지침」¹⁵⁾에 의거하여, 개최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통해 행사의 적격성을 심사한다. 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재부의 훈령과 개정 내용, 심사 과정 등을 다룬 언론보도를 참고했다.¹⁶⁾

기재부의 국제행사 관련 규정은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 내용이 바뀐 바 있다. 기재부는 2020년까지 국제행사관리지침의 심사기준 세부항목에서 “국제행사의 명칭이 BIE 협약에 위반되지 않은지(필요한 경우 엑스포(EXPO) 명칭 사용의 제한 가능)”

12) BIE Convention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훈령 제616조), 2022.11.7.,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eventGubun=060115#iBgcolor0>

14)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77호), 2023.1.2.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eventGubun=060115#iBgcolor0>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행사 관리지침 (기획재정부 훈령 제617조), 2022.11.7.,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eventGubun=060115#iBgcolor0>

16) 박세환, “국제행사 심사 대상 기준 완화… 재정 낭비 우려”, 국민일보, 국민일보 웹사이트, 2022.12.22.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79051>

유호윤, “[답사K] ④ 승인을 분석결과 91.4%…기재부 심사 어떻게?”, KBS 뉴스, 방송기사, 2021.11.3.

이라는 문구를 명시해줬는데 마지막 개정안에선 이러한 내용이 사라졌다.¹⁷⁾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기재부의 담당 공무원과 추가적인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다.

3. 학술 자료

하동세계차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하동세계차엑스포 기본계획’을 제공하고 있다.¹⁸⁾ 이 계획서는 문체부 산하의 정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 하동균의 의뢰를 받아 작성했다. 계획서에는 엑스포의 종류 및 개요, 차 산업과 하동세계차엑스포의 운영 계획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엑스포와 국제행사, 지역축제 등을 학술적으로 다룬 논문 자료도 참고했다. 성공적인 국제행사는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역 홍보 효과를 통한 신발전산업으로 활용될 수 있다.¹⁹⁾ 다만, 저자들은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획과 운영, 사후관리의 전 단계에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자료에서는 엑스포의 개요 및 공인/비공인 엑스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지역 엑스포가 지역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친숙하게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관광 콘텐츠로서의 브랜드화, 국가 차원의 공인 인증 시스템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즉, 지역 행사의 운영과 목적성에 내실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²⁰⁾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 엑스포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신창열 박사는 자신의 논문에서 BIE가 일반적으로 EXPO라는 명칭의 사용을 묵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인천세계도시축전이 문제가 된 것은 이듬해 개최될 ‘공인 엑스포’인 2010년 상하이 세계엑스포와의 유사성을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행사 관리지침 (기획재정부 훈령 제485호), 2020.4.3.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3&tabMenuId=193#AJAX>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5664>

18) 오훈성, 소은정, 이단비, “2022 하동세계차엑스포 기본계획서 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1-482.

* 하동세계차엑스포는 2022년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 문제로 올해(2023년)로 연기됨.

해당 자료는 첨부 파일로 제출

19) 김학열, 김항집, 김갑성, 김용석, 나강열, 주수현, 조상필, “국제적 메가이벤트를 활용한 지역발전 전략”, 도시정보, 2012, No.359, 3-23.

20) 권윤경, “엑스포의 브랜드화 전략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2015, No.46, 37-46.

이유로 제한한 것이라 설명했다.²¹⁾ 즉, BIE는 공인 엑스포의 주제나 전시 등과 혼동될 여지가 적은 '비공인 엑스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편이라는 것이다.

상기한 BIE 협약의 분석을 위해 국제법의 효력을 분석한 관련 학술자료도 참고했다. 자료 조사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자료는 서울대학교 이재민 교수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이다.²²⁾ 이재민 교수는 연구 서문에서 “국제 박람회라는 고유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특정 국가나 기업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규율하고 있는 국제법 규범의 적용을 받고 있다”라며, BIE 협약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여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엑스포라는 명칭의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중앙정부 모두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BIE 협약 당사국이 지켜야 할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민 교수가 작성한 보고서의 핵심은 통상적으로 국제법 법리는 지역정부와 중앙정부를 동일한 ‘정부 구성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에 따라 특정 지자체의 정책 혹은 조치가 국제협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도 우리 정부의 협정 위반과 동등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더불어,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지역 엑스포 유치를 방관하고 있는 것도 협약 이행 의무의 위반으로 보았다. 이러한 협약의 해석과 관련, 협약의 주요 부분과 법령 해석을 위해 추가로 다른 국제법 교수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다.

21) 신창열, “메가 이벤트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지지도·개최지속성 간의 구조 관계 연구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호텔관광학과 관광경영전공, 2010., 1-133.
22) 이재민, “「국제 박람회에 관한 협약」의 국내이행과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 및 향후 대응 방안 검토”,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13.

인터뷰

☎ 관공서 인터뷰

관공서 인터뷰는 크게 행사를 진행하는 지자체와 예산 지원 심사 및 국제행사 승인의 주체인 중앙부처의 두 가지로 나뉘어 진행했다. 먼저, 엑스포를 개최했거나 개최를 추진 중인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자체 인터뷰의 경우, 세계차 엑스포를 개최하는 하동군과 보성군에 인터뷰를 요청했다.

보성군은 차원예유통과 차산업팀에서 세계차 엑스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보성군에는 크게 아래와 같은 질문을 던졌다.

Q1. 2020년부터 세계차엑스포라는 명칭을 사용하셨는데, 2020년 엑스포는 온택트 행사로 개최됐다. 엑스포 명칭 변경이 온택트 진행방식과 연관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엑스포로 예정되어 있던 행사가 코로나 19 시기와 맞물려 온라인으로 개최된 것인가?

Q2. 보성군에서는 일찍이 세계차엑스포라는 명칭을 사용해왔는데, 기재부의 국제행사 승인은 받지 않았다. 신청을 했으나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인가? 혹은 그 외의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Q3. 보성군청의 연계 사이트 ‘보성문화관광’에는 보성군 대표 축제로 ‘보성다향대축제’가 등록되어 있다. 보성다향대축제는 금년 세계차엑스포와 개최 기간, 장소가 완전히 동일인데 둘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

Q4. 하동세계차엑스포의 경우, 자체 웹사이트에서 기본 계획서를 제공하고 있는데, 보성군 측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가?

다만, 보성군에서 엑스포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님이 엑스포 및 차산업 관련으로 해외 장기 출장을 나가 직접 연락이 닿지 못했다. 이에 차원예유통과의 다른 주무관님과 보성군청 문화관광과의 다향대축제를 담당하는 주무관님을 인터뷰했다. 아쉽게도 다른 담당자께서는 엑스포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알지 못해 다향대축제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는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하동군청에서는 하동세계차엑스포 조직위원회와 하동군청 기획예산과 엑스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중, 기획예산과에 문의해 아래와 같이 하동세계차엑스포 관련 질문을 던졌다.

Q1. 하동군에서는 각종 홍보에서 국내 최초의 차산업 분야 정부승인 국제행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보성군은 이전부터 엑스포라는 명칭을 사용해왔는데, 하동군이 먼저 국제행사를 승인 받은 배경이 있는가?

Q2. 하동세계차엑스포 현장 답사 당시, 기존의 아생차문화축제와의 차이점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이용객이 많았다. 이에 대한 논의가 하동군 내부적으로 있었는가?

Q3. 정부승인 국제행사의 경우, 외국인 이용객 및 참여국 수 등의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안다. 문체부의 '2023년 지역축제 개최 계획'을 보면 세계차엑스포의 전신인 '아생차문화축제'의 외국인 이용객 수가 집계된 적이 없는데, 관련 수치는 어떤 근거로 작성되었는가?

이에 하동군에서는 보성군은 정부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엑스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을 알고 있지만, 상세한 배경은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이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다는 내용과 함께 외국인 이용객 수 등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조건 산정의 경우, 용역 기관에 용역을 맡겨 예상 수치를 집계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이에 국제행사의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에도 승인 절차와 관련하여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기재부 훈령 485호까지 심사기준 세부 규칙에 존재했던 BIE협약과 관련된 규정이 사라지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Q2. 기재부의 국제행사 심사 과정은 BIE의 공인이 없는 비공인엑스포인데, 심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엑스포란 이름이 사용되어도, 기재부에서 승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Q3. 비공인엑스포의 경우,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BIE측의 항의, 혹은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가?

Q4. 인천세계도시축전 외에 BIE가 공식적으로 엑스포라는 명칭에 항의한 사례가 있는가?

Q5. 기재부의 국제행사심사를 통과해 올해 개최되는 국제행사 중, 명칭에 엑스포가 포함된 행사는 무엇이 있는가?

국제행사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길채 사무관은 이와 관련해 BIE 협약상, 엑스포 혹은 박람회라는 명칭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답했다. 다만, 국제행사심사 위원회는 단순히 국비 예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할 뿐, 엑스포의 개최 여부 자체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가 엑스포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명칭 변경을 권고할 뿐, 이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단이 없다. 즉, 국비 지원 없이, 혹은 국비를 지원받더라도 엑스포라는 이름으로 개최를 강행할 경우, 중앙정부에서는 이를 막을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BIE가 공식 항의한 것은 인천세계도시축전이 유일했다면서도,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 되도록 엑스포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BIE의 대응이 다소 일관적이진 않지만, 협약에서 문화나 교육, 예술 등의 주제와 관련된 엑스포는 다소 용인되어 있다며, 일관적인 대처가 어려워 별도의 대응이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 엑스포 전문가

인식 조사와 자료 조사를 통해 엑스포라는 명칭이 다소 남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마케팅이나 축제 기획의 관점에서 이러한 생각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 대상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 외의 전문가는 축제 기획 및 운영과 마케팅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물들로 뽑았다. 먼저, 관광경영학, 관광학 등 학계에서 활동하시는 교수들을 추렸다. 더불어, 축제 기획과 마케팅 현장에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정리해 인터뷰 대상자를 정했다. 가장 처음 인터뷰를 요청한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의 이충기 교수는 하동세계차 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을 맡기도 한 신창열 박사님을 소개했다. 이에 신창열 박사에게 연락을 취해 인터뷰 허가를 받았으나, 외부 일정 문제로 예선과제 제출 이후인 6월 21일에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신창열 박사는 20000 청주인쇄출판박람회와 2002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비롯, 다수의 비공인 엑스포 기획 및 조직 업무를 담당해왔다. 공인 엑스포인 2010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의 기획 업무와 2012 여수박람회 한국관, 실사단 방문, 및 계획 수립 업무 등에도 참여한 엑스포 전문가이다. 신창열 박사에게 물어본 질문은 다음과 같다.

Q1. 원칙적으로는 BIE의 공인을 받지 않은 행사에 엑스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엑스포’라는 명칭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BIE 규정이나 BIE 협약 내용이 있는가?

Q2.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은 2010 상하이 엑스포와 주제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문제가 제기되어 이름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 BIE가 엑스포 명칭 사용에 제재를 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Q3. 공인 엑스포와 비공인 엑스포 모두에 ‘엑스포’라는 명칭이 사용되는 것이 일반 대중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Q4. 하동세계차엑스포의 사무총장을 맡으셨다. 정부 승인을 받은 하동의 세계차엑스포와 지자체 단독으로 개최된 보성세계차엑스포의 성격이 다름에도 같은 이름을 사용한 것에 대해 하동세계차엑스포 조직위원회의 문제 제기는 없었는가?

Q5. 다수의 엑스포가 장기적인 전략 없이 ‘엑스포’라는 이름에만 매몰되어 개최되고 있다. 차별화된 전략으로 성공을 거둔 국내외의 엑스포 사례가 있다면 무엇인가?

신창열 박사는 이에 대해 BIE 협약상 엑스포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있지만, 지역 엑스포에는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창열 박사는 BIE 협약 2조에서 엑스포가 아닌 것으로 규율하는 ▲3주 미만의 박람회 ▲순수 미술 박람회 ▲본질적으로 상업적 성격의 박람회에 대부분의 지역 엑스포가 포함되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애초에 BIE 협약에서 비공인 엑스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지자체가 국제행사에 ‘엑스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이 ‘엑스포’ 명칭 사용을 제한당한 사례에 관해서, 신창열 박사는 인천세계도시축전의 경우 주제와 성격이 유사하고 규모가 꽤 컸다는 부분에서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주최한 중국 측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중국 측이 문제 제기를 하자 BIE 측에서 조정, 권고 차원에서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서 인천세계도시축전으로 명칭 변경을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여러 행사에서 엑스포라는 명칭이 사용되며, 실질적인 내용은 부족한

행사가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감했다. 신창열 박사는 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의료 및 바이어 산업이 발전한 오송의 사례를 예시로 들며, 내실 있는 지역 엑스포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가 발전하고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음도 강조했다.

④ 민간 마케팅 전문가

민간 전문가는 ‘제이비축제연구소’의 박종부 대표와 온라인 매체 ‘WalkintoKorea’의 강대훈 대표에게 연락을 취했다. 박종부 대표는 하동야생차문화축제 등 여러 지역 축제에서 축제 기획을 맡은 제이비축제연구소의 대표로, 지역 축제 기획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리라고 판단해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

WalkintoKorea는 한국의 관광 문화 정보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강대훈 대표는 KOTRA 서비스 자문위원 등을 맡은 바 있는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이다. 또, 자신의 글에서 하동세계차엑스포와 보성세계차엑스포가 동시기 열려 도시 브랜딩과 차별화 차원에서 실패했다고 지적하는 등 지자체 행사에도 관심이 많은 인물이다. 강 대표의 블로그와 WalkintoKorea 웹사이트를 통해 강 대표와 연락을 취했고, 강 대표 측에서 인터뷰를 승낙했다. 강대훈 대표와는 6월 14일 전화 인터뷰, 8월 16일 대면 인터뷰로 총 2차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질문은 아래와 같다.

Q1. 동시기 국내에서 같은 주제와 명칭의 엑스포가 개최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러한 개최방식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Q2. 글로벌 전략이 부족한 국제 행사, 엑스포라는 명칭의 사용이 축제 만족도나 인식도 측면에서 역효과를 줄 수 있는가? 더불어, 엑스포 자체의 위상이나 의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Q3. 저서에서 획일적인 ‘엑스포’ 등 명칭의 지양과 도시 브랜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된 국내외의 우수한 사례가 있는가?

강 대표는 이와 관련해, 대전엑스포와 여수엑스포 등 이전 엑스포의 성공으로 인해

여러 지자체에서 ‘엑스포’라는 명칭에 매달리게 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략이 부재한 엑스포 명칭의 남용은 ‘엑스포’라는 행사의 의미를 아는 관객에게는 실망감을 안기고, 장기적으로는 국제 행사로서 엑스포가 가지는 의의와 가치를 퇴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보성과 하동의 경우도 확일적으로 차 엑스포라는 명칭을 쓰는 것보다, ‘하동찾길’과 같이 행사의 성격을 더욱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네이밍 전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스페인의 ‘라 토마티나’,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등 차별화된 컨셉으로 고유하고 특색 있는 지역 행사로 자리잡은 해외 사례를 알려주었다.

㉠ 국제법 전문가

본선 과제 수행과정에서 팩트체크를 진행하면서, BIE 협약이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인터뷰에 협조해준 신창열 박사의 지자체의 엑스포는 BIE 협약의 규정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검증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따라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이재민 교수를 비롯한 다수의 국제법 학자에게 검증을 부탁했다.

가장 먼저, 보고서를 작성한 이재민 교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다만, 이재민 교수의 거절로 국제법을 연구한 다른 학자를 찾았다. 먼저, 연세대학교 로스쿨의 이기범 교수에게 이재민 교수의 용역 보고서와 함께 BIE 협약의 내용, 협약에 대한 모꼬지 팀의 해석을 첨부해 지자체의 엑스포 명칭 사용 가능여부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기범 교수가 인터뷰를 승낙하여 8월 21일과 8월 23일 총 두 차례에 걸쳐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질문은 아래와 같다.

Q1. BIE 협약에서 다뤄야 할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Q2. 이재민 교수는 BIE 협약의 ‘정부’가 지자체를 포괄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엑스포 개최는 협약의 의무 사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해석이 통상적인 국제법 해석에 부합하는가?

Q3. 신창열 박사는 일반적인 지자체의 엑스포가 BIE 협약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이기범 교수는 이에 대해 이재민 교수의 주장대로 지자체가 정부 구성에 포함되어 법적 의무를 지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BIE 협약에서 엑스포의 정의를 규율한 1조와 2조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즉, 비공인 엑스포 대다수가 협약에서 정의하는 엑스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엑스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교수는 협약 1조 2항(An exhibition is international when more than one State takes part in it.)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의 ‘International’은 일반적으로는 ‘국제적인’으로 해석되지만, 법리상으로 나라와 나라 간의 공식적인 관계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엑스포를 개최하더라도 민간 기업이 아닌 공식적인 다른 ‘국가 정부’ 차원의 참여만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기범 교수는 통화 내용 및 인터뷰 영상의 사용을 원하지 않고,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아달라고 요구했다. 따라서 최종 영상 제출에는 이기범 교수 발언의 직접 인용을 피하고 대독 형식으로 인터뷰 내용을 재연했다.(본 리포트도 외부에 공개될 시 이기범 교수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해당 내용을 교차검증하고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강병근 교수에게 ‘BIE 협약 상 지자체의 엑스포 명칭을 사용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를 메일로 문의했다. 강병근 교수 역시 이기범 교수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BIE 협약상 제한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힘을 실어주었다. 이에 이기범 교수의 해석을 바탕으로, 지역 엑스포는 BIE 협약이 규정하는 엑스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명칭 사용을 제한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 BIE 관계자 인터뷰

마지막으로 엑스포를 총괄하는 국제기구인 BIE의 입장을 듣기 위해 BIE에 연락을 취했다. BIE는 자신들의 공식 홈페이지에 연락용 메일 주소를 기재해뒀다. 해당 주소로 메일을 보내 “엑스포라는 이름이 널리 사용되는 것에 대한 BIE의 입장은 어떤지”등을 물었다. 다만, 공식 채널을 통해 답변이 오지 않아 다른 연락책을 모색했다.

추가적인 자료 조사를 통해 현재 주프랑스 한국 대사를 맡고 있는 최재철 대사가 오랜 기간 BIE의 집행위원장을 지낸 이후, 현재는 BIE의 총회회장을 역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BIE의 소재지가 프랑스 파리에 있어서 우리 국가의 엑스포 관련 업무도 기본적으로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국 대사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과 공식 메일 계정을 통해 인터뷰 섭외 요청서를 보내 인터뷰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문의 결과, 프랑스 대사관 측에서 긍정적으로 회신을 해주었다. 먼저, 프랑스 대사관 실무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개략적인 인터뷰 내용과 날짜를 정한 후, 9월 6일 화상통화 서비스인 구글미트를 통해 최재철 대사와의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재철 대사가 오랜 기간 BIE에 근무해왔고, 현재도 유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 질문은 아래와 같다.

Q1. 비공인 엑스포에 ‘엑스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가? 만약 문제가 된다면 협약의 어떤 부분이 사용에 제한이 되는 것인가?

Q2. 비공인 엑스포에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Q3. BIE 측에서는 엑스포라는 명칭의 사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Q4. BIE가 일반적으로 엑스포라는 명칭의 사용을 용인하고 있음에도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이름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

인터뷰 결과, 최재철 대사는 지역 엑스포와 같은 비공인 엑스포가 엑스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굳이 문제삼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이기범 교수와 강병근 교수가 지적했듯이, 비공인 엑스포는 본질적으로 ‘엑스포’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BIE가 규정한 엑스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엑스포가 국제 행사인 만큼, 외국 정부나 외교 단체의 공식적인 참가가 아닌 우리 정부 차원의 지원 등은 ‘국제적 성격’을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천세계도시엑스포에서 이름이 변경된 인천세계도시축전의 경우, 실제 기획 과정에서 중국의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했고 개최 기간이나 규모도 작지 않은 만큼 주최 측인 중국의 반발이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당시 2012 여수 엑스포의 개최를 앞두고 있었던 만큼,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외교적 갈등을 피하고 여수 엑스포의 원활한

준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실제 추진 과정에서도 엑스포의 성격, 규모와 관련해 문제가 다소 나왔던 만큼 최종적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비공인 엑스포와 공인 엑스포 한국관 기획 경험이 있는 신창열 박사에게 추가로 문의했다. 신창열 박사는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역 엑스포에 외국 정부가 공식적인 국가관을 파견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확인했다.

현장 답사

자료 조사를 토대로 이번 팩트체크의 주요 대상인 하동세계차엑스포에 직접 답사를 다녀왔다. 주요 조사 대상인 하동세계차엑스포가 예선 기간과 맞물리기도 했고, 직접 현장을 찾아가 체험해보고, 다른 참가자들이 엑스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볼 유의미한 기회로 판단했다. 자료 조사 과정에서 지역 엑스포의 부실한 운영 현황을 다룬 KBS의 보도²³⁾를 접했는데, 하동세계차엑스포의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할 필요성도 느꼈다. 이에 5월 29일, 하동세계차엑스포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 하동세계차엑스포는 1행사장과 2행사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장소는 약 30분 정도 떨어져 있었다. 시간 관계상 답사 일정은 하루로 잡고 첫차를 타고 하동으로 이동, 답사를 진행했다. 답사 과정에서 판매 부스를 운영하는 상인과 엑스포 관람객, 부스 참여 업체와 대면 인터뷰하며 엑스포 관련 인식 조사를 수행했다.

더불어, 외국인의 참여 비율은 높지 않았다. 우천에도 불구하고 일반 관람객은 꽤 많은 숫자가 있었지만 엑스포 현장에 7시간 정도 있었음에도 외국인 관람객은 단 한 명밖에 없었다. 그 외의 외국인 참여는 차 산업 부스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인원 2명이 전부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엑스포 관련 팩트체크를 수행하던 초기에는 ‘부실한 지역 엑스포 운영’이라는 주제와 맞아있다고 보였다. 그러나 팩트체크 과정을 모두 수행하고 나니 이는 하동세계차엑스포의 개최가 BIE 협약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뒷받침해

23) 유호윤, “[답사K] ③ 지자체 국제행사의 비밀”, KBS 뉴스, 방송기사, 2021.11.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5664>

주었다. 상술했듯, 하동세계차엑스포 현장에는 외국 정부 기관의 공식적인 참여가 없었기 때문이다. 외국 관람객 혹은 부스 참여자는 모두 민간 기업 및 개인으로 한정됐기에, 공인 엑스포의 ‘국제적 성격’을 만족시키지 못해 BIE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셈인 것이다.

결론 작성하기

1. 엑스포의 종류와 구분방식

〈표 1: 엑스포 종류별 특징〉

구분	공인 엑스포				비공인 엑스포	
	등록 엑스포 (World Expo)	인정 엑스포 (Specialized Expo)	A1 원예 박람회 (Horticultural Expo)	밀라노 트리엔날레 (Triennale di Milano)	정부 승인 국제행사	자체 엑스포
주제	우리 시대의 보편적 문제	국제적 관심사와 연관된 명확한 주제	자연과 원예	건축, 디자인, 공예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승인 주체	BIE	BIE	BIE/AIPH	BIE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주체 없음
주최 기관	각국 정부	각국 정부	각국 정부	밀라노 트리엔날레 협회	개최 단체 및 지자체	개최 단체 및 지자체
부지면적	제한 없음	최대 25ha	최소 50ha	-	최소 0.1ha ²⁴⁾	제한 없음
개최기간	6주~6개월	3주~3개월	3~6개월	최대 6개월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개최	2010	2012	2023 도하 원예 박람회	2022 밀라노	2023 하동	2023 보성
사례	상하이엑스포	여수엑스포	원예 박람회	트리엔날레	세계차엑스포	세계차엑스포

24)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가목

Expo는 ‘박람회’라는 뜻의 Exposition의 줄임말이다. 전 세계의 박람회를 총괄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에서는 엑스포를 ▲World Expo(등록 엑스포) ▲Specialized Expo(인정 엑스포) ▲Horticultural Expo(A1등급의 원예 박람회) ▲Triennale di Milano(밀라노 트리엔날레)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등록 엑스포는 5년에 한 번, 최대 6개월 동안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엑스포로 현재 부산에서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등록 엑스포에 해당한다. 더불어, 전시 주제의 선정 및 전시 면적, 국가관 설립 등이 비교적 자유롭다.

인정 엑스포는 영어 명칭의 ‘Specialized’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특정 주제를 바탕으로 전시를 진행한다. 등록 Expo 사이에만 개최될 수 있으며, 등록 엑스포에 비해 전시 기간 및 면적의 제한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전과 여수에서 인정 엑스포가 개최된 바 있다.

원예박람회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의 주관으로 개최되는 박람회로, 규모에 따라 A1, B, C, D의 4등급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A1 등급의 대규모 원예박람회(World Horticultural Exhibitions)는 BIE의 승인을 받아 정식 엑스포로 구분되며, 그 이하 등급은 엑스포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건축과 디자인, 공예 등을 다루는 밀라노 트리엔날레도 BIE가 공인한 엑스포에 포함된다.

보성과 하동에서 개최되는 세계차엑스포와 같이 지자체가 개최하는 ‘엑스포’라는 명칭의 국제행사는 대부분 BIE의 공인을 받지 않은 비공인 엑스포에 해당한다. 특히 하동의 세계차엑스포는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열린 ‘정부 승인 국제행사’에 해당한다. 다만, 국제행사심사위원회는 국비의 지원 여부를 심사할 뿐, 엑스포 행사의 개최 여부 자체를 심사할 권한은 없다. 이 때문에 보성세계차엑스포는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사 없이도 엑스포라는 명칭을 쓸 수 있었다. 이러한 형태의 엑스포를 가리키는 말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본 리포트에서는 이를 ‘**자체 엑스포**’로 명명했다. 그리고 본 리포트와 영상 콘텐츠에서 다루는 지역 엑스포는 정부 승인 국제행사와 자체 엑스포를 포함한, 비공인 엑스포를 의미한다.

올해 국내에서 ‘엑스포’ 혹은 ‘박람회’라는 명칭으로 개최되는 행사는 수십 개가 넘는다. 이 중, 하동세계차엑스포와 마찬가지로 정부 승인 국제행사에 해당하는 엑스포에는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와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국제농업박람회’ 등 올해

에만 5개가 예정되어 있다. 경주시의 ‘2023 대한민국 해양수산엑스포’, 춘천의 ‘국제 디자인교육엑스포’ 등 자체 엑스포는 단체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수십 개에 달한다.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주관하는 기재부에서는 BIE 측의 문제제기를 막기 위해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가 엑스포, 박람회라는 명칭의 사용을 지양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행사의 개최와 명칭 사용 여부는 결국 지자체에 달려 있어서 명칭의 사용을 온전히 막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우리 법은 저명한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의 행사 등과 관련된 상표권의 등록은 해당 국제기구만 가능하다고 규정해놓았다. 그러나, ‘엑스포’ 혹은 EXPO라는 명칭은 같은 세계 3대 국제행사인 올림픽, 월드컵과는 달리 국내에서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BIE 협약에서도 엑스포의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엑스포’라는 명칭의 사용이 문제가 되어 명칭이 변경된 사례는 ‘인천 세계도시축전’이 유일했다.

다만, BIE 협약이 규정한 엑스포의 정의와 범위를 통해 ‘엑스포’라는 명칭의 사용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BIE 협약의 1조와 2조에서는 각각 엑스포의 정의와 엑스포에 해당하지 않는 행사의 조건을 정리하고 있다. 신창열 박사는 일반적인 비공인 엑스포가 BIE 협약 2조가 규정하는 ‘非엑스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BIE의 통제 바깥에 있다고 말했다.

다수의 국제법 전문가와 BIE 측은 일반적인 지역 엑스포가 BIE 협약 1조가 규율하는 ‘international’, 국제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BIE가 공인하는 ‘엑스포’에 해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적 성격을 지니기 위해서는 엑스포에 국가 기관이 공식적으로 참여하거나, 외교 채널을 거쳐서 국가 외교인사가 초청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지역 엑스포는 이러한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역 엑스포는 BIE의 공인 엑스포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며, ‘엑스포’ 명칭의 사용 유무와 상관 없이 BIE의 관리 범위 내의 엑스포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BIE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일하게 문제가 됐던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의 경우, 초기에는 인정 엑스포 개최를 노리고 준비됐다. 인정 엑스포 개최 시도가 좌절된 이후에도, 이에 준하는 규모로

행사를 준비했고 실제 행사 과정에서도 이듬해 중국에서 열릴 공인 엑스포인 2010년 상하이 세계 엑스포를 많이 참고했다. 중국은 당연히 이를 문제 삼았고, BIE 측이 조정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명칭 변경을 권고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당시 우리나라가 공인 엑스포인 2012년 여수박람회를 준비 중이었기에, 상황에 문제 의식을 느끼고 명칭 변경을 진행한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경우에도 **BIE가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엑스포’ 명칭의 남용

위와 같은 이유로 엑스포라는 명칭의 사용은 비교적 자유롭게 용인되고 있으며 명칭 사용을 제한할 뚜렷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엑스포’라는 단어가 너무 많은 행사에 남용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BIE 공인 엑스포와 비공인 엑스포에 모두 엑스포라는 단어가 쓰이다보니 일반 대중이 엑스포의 일반 개념과 종류를 인식하는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최재철 대사는 인터뷰에서 “BIE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들은 엑스포라는 이름을 왜 이렇게 좋아하느냐고 물은 적도 있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인식 조사 결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엑스포라는 개념과 분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식 조사에서 각각의 엑스포를 정확하게 구분한 사람은 12명으로, 전체의 약 11.3%에 불과했다. 엑스포의 유형 분류 체계를 알고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모른다는 응답이 약 75%에 달했다. 방문 경험과 관련해서도 응답자들이 방문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엑스포의 상당수가 비공인 엑스포에 해당했다. 즉, 대중들의 엑스포 이해도는 낮은 데 반해 엑스포라는 명칭이 다소 남용되고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의 정길채 사무관은 지자체가 행사에 ‘엑스포’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단어가 주는 신뢰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축제나 행사라는 명칭보다 엑스포라는 명칭이 주는 공신력 덕분에 일반 방문객들이 막연한 신뢰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WalkintoKorea의 강대훈 대표도 여러 지자체가 성공한 엑스포로 꼽히는 ‘대전엑스포’와 ‘여수엑스포’의 성공 신화에 매달려 엑스포라는 명칭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라 평가했다.

강 대표는 장기적 전략이 부재한 축제, 행사의 ‘엑스포화’는 결국 지역만의 특색이나 독창성을 잃게 만들어 지역 브랜드의 가치가 낮아질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명칭에 집착하기보다는 행사의 질과 기획 자체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엑스포라는 명칭, 그리고 이전 엑스포의 성공 사례를 떠올리고 온 방문객에게는 오히려 기대치에 비해 낮은 행사의 질로 되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신창열 박사 역시 엑스포라는 명칭이 많은 행사에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는 상황에 공감하며, 엑스포 명칭이 여러 행사에 혼용될 경우 행사 주최 측이나 잠재 고객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엑스포 명칭 사용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창열 박사는 성공적인 지역 엑스포의 사례로 2002년 오송 바이오엑스포를 언급했다. 오송 바이오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계기로, 충북의 작은 지역이었던 오송이 바이오, 의료 산업 측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거듭했다고 이야기했다.

3. 최종 결론

엑스포라는 용어는 공인과 비공인을 가리지 않고 널리 사용되고 있다. BIE는 이에 대해 별도의 제재를 가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이런 다수의 ‘비공인 엑스포’가 국제행사로서의 엑스포 성격을 띠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적 성격이란 외국 정부의 공식적인 참가를 의미한다. 즉, 외국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 혹은 개인이 참가하는 엑스포는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실제 사례는 없었지만, 비공인 엑스포라 하더라도 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참가해 ‘국제적 성격’을 지니게 됐다면 BIE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엑스포’라는 명칭의 사용이 문제가 됐던 인천세계도시축전의 경우 상하이 엑스포와의 유사성을 이유로 중국이 항의했기에 명칭이 변경됐다. 이 경우에는 국제적 성격은 없었으나 주최측인 중국이 항의한 만큼, BIE의 권고를 받아들여 명칭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공인 엑스포와의 주제의 유사성, 혹은 국가기관의 참여를 통한 외교적 성격이 강조되지 않는 이상 비공인 엑스포의 명칭 사용을 제한할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에 “OO 엑스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이름일까?”는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

다만, 이와 같은 엑스포 명칭의 남용과 관련해 일반 대중은 엑스포에 대한 개념 정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은 엑스포의 분류 체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엑스포의 분류 기준을 알더라도 각각의 엑스포를 정확하게 구분하거나 승인 주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엑스포를 주관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무원도 관련 규정과 분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등 엑스포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해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대훈 대표는 각 지자체가 ‘대전엑스포’와 ‘여수엑스포’의 성공 신화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며, 엑스포라는 명칭의 남용이 “엑스포가 가지는 의미 자체를 퇴색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엑스포라는 명칭에만 의존하는 지자체의 브랜드 가치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엑스포’라는 명칭이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만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개별 지자체의 자유일 것이나 이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명칭에 집착하기보다는 지역 축제로서의 정체성을 살려 문화와 산업을 잘 융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성공적인 엑스포를 통해 미래의 신산업을 일궈낸 오송 바이오엑스포의 사례처럼 단기적 행사가 아닌 미래 산업과 지역의 발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미디어 콘텐츠

엑스포라는 명칭,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가능한가?

콘텐츠 소개

➔ 기획의도

부산엑스포 유치 열기가 활발한 지금, '엑스포'는 각종 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거쳐 개최되는 공인 엑스포를 제외하고도, 수많은 지역에서 지자체가 '엑스포'라는 명칭으로 지역의 문화, 자원 등을 홍보하는 국제행사를 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엑스포'라는 명칭이 널리 쓰이고 있는 가운데, '엑스포'가 정확히 무엇인지, 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지자체가 여는 국제행사, 즉 지역 엑스포가 '엑스포' 명칭을 사용해도 괜찮은 것인지에 관해 질문을 던지며, 엑스포를 관리하는 국제기구인 '국제박람회기구', 일명 'BIE'에서 제정된 'BIE협약'을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라는 말 때문에 재생하기 망설여지는 어려운 영상이 아닙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영상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트렌디한 뉴미디어 뉴스 형식을 활용할 것입니다. 쉽고 재밌게, 그러나 중요한 의미는 모두 이해하면서 지역 엑스포에 대한 'Fact'를 확인해나가는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엑스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고하여, 궁극적으로는 엑스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상세설명

[영상구성] 저희 팀은 현재 뉴미디어 뉴스에서 많이 쓰이는 스튜디오 촬영으로 영상을

구성했습니다. 팀원끼리 각각 촬영 스태프와 진행자로 역할을 분담해 스튜디오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튜디오 촬영본을 위주로 자막, 관련 그래픽을 첨부하여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자료화면의 경우, 담당 공공기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한 부산 엑스포 관련 영상을 제외하고는 지원 예산을 활용하여 직접 촬영한 영상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인터뷰 장면의 경우, 인터뷰이들의 동의를 구한 후에 영상과 음성을 사용했습니다. 인터뷰 화면은 대면 인터뷰, 전화 인터뷰, 화상 인터뷰와 음성재연의 4가지를 활용해 구성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인터뷰이는 영상 구성의 생동감을 위해 음성 재연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줄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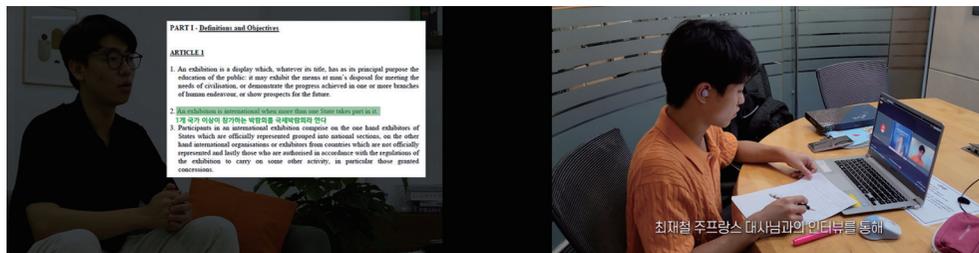
▶ 도입부: 도입부에서는 대통령의 직접 PT를 진행할 정도로 큰 엑스포의 위상과 엑스포 이해도가 낮은 대중의 무관심을 대조해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엑스포가 그 중요도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엑스포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엑스포라는 이름이 자유롭게 쓰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엑스포 개념 설명 및 팩트체크 주제 선정

엑스포(Expo)는 영단어 Exposition의 앞부분에서 유래한 단어로 우리말로로는 박람회라고 번역됩니다. 올림픽, 엑스포와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로 분류되는 엑스포는 국제박람회 기구, BIE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BIE가 주관하는 공인 엑스포에는 등록 엑스포, 인정 엑스포, A1 등급의 원예 박람회, 밀라노 트리엔날레 등이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엑스포'라는 이름으로 개최되는 대부분의 행사는 BIE의 승인을 받지 않는 비공인 엑스포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비공인 엑스포는 이는 BIE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과연 '엑스포'라는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저희 모꼬지 팀은 '엑스포라는 명칭,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가?'를 주제로 팩트체크를 수행했습니다.

▶ 팩트체크 과정: 엑스포 명칭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주된 기준은 BIE 협약, 그 중에서도 엑스포의 기본 성격과 협약의 예외 사례를 규정한 BIE 협약 1조와 2조

입니다. 특히 BIE 협약 1조 2항에서는 1개 국가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적 성격(International)이 엑스포를 규정하는 기본 요건임을 강조했습니다. 즉 외국 정부의 공식적인 참여가 없다면 엑스포라는 명칭이 붙더라도 BIE가 규정하는 엑스포의 기본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를 섭외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국제법 교수와 최재철 BIE 총회 의장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지역 엑스포가 BIE가 규정하는 ‘국제적 성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수의 지역 엑스포를 조직한 경험이 있는 신창열 박사도 국내에서 개최된 지역 엑스포에 외국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방문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유일하게 엑스포라는 명칭의 사용이 제한된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의 경우에는 등록 엑스포 개최국인 중국의 문제 제기로 BIE 권고에 따라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즉, BIE 측에서 직접적으로 명칭 사용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진 않은 셈입니다. 따라서 ‘엑스포라는 명칭,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가?’는 대체로 사실로 판명했습니다.



▶ 제언

다만, 엑스포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낮은 만큼, 엑스포라는 명칭을 남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일반 대중은 엑스포의 정확한 종류를 구분하지 못하고라 명칭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강대훈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엑스포라는 이름이 남용되는 것이 공인 엑스포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지역 축제의 효과도 반감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명칭보다는 미래 산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신창열 박사도 신산업을 개발한 오송바이오엑스포의 사례를 바탕으로 엑스포의 내실을 튼튼히 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앞으로 개최될 엑스포도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성공적 행사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저희가 제출한 최종 결과물은 뉴미디어 뉴스 형식의 영상을 의도하고 제작했습니다. ‘14F’나 ‘스브스뉴스’ 등 주로 유튜브를 통해 전파되는 새로운 형식의 뉴미디어 뉴스는 다소 어렵고 딱딱한 주제도 시청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뉴미디어 뉴스라는 형식을 선택한 이유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대중에게 전달되고 공유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 엑스포 인식 조사 길거리 인터뷰 캡처

영상에서도 드러났듯이, ‘엑스포’라는 주제는 그 인지도와 위상에 비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여수와 대전에서의 인정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등록 엑스포인 2030 부산 세계엑스포 개최를 열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랍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저희는 ‘엑스포’라는 행사의 성격을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이 엑스포 유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완성된 영상은 저희 팀원 각자가 보유한 SNS 계정, 또는 모꼬지팀 명의의 SNS 계정을 별도로 개설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반 SNS 계정은 도달 범위가 지인에 한정되어 파급력이 낮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영상 제작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프랑스 대사관, 2030 부산엑스포 공식 유튜브 채널 등 규모가 비교적 큰 공공기관과 협의해 해당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영상 길이가 13분 정도로 일반적인 SNS, 홍보 채널을 통해 시청하기에는 다소 긴 만큼 영상의 내용을 요약하여 배포할 수 있는 짧은 카드뉴스 형태의 게시물을 배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콘텐츠는 엑스포의 종류를 6개로 구분하고, 그 구분 근거와 관련 법령과 협약 등을 상세히 분석한 만큼 다소 텍스트와 어려운 조문이 많은 편입니다.

영상 콘텐츠의 경우, 시간이 제약된다는 특성상 팩트체크 과정에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담지 못했는데 이를 카드뉴스를 통해 좀 더 상세하게 담아내고 싶습니다. 더불어, 인스타그램 등 최근 자주 사용되는 SNS는 영상 길이의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도 카드뉴스를 활용한 콘텐츠 공유가 비교적 용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WalkintoKorea 강대훈 대표와 인터뷰를 마친 후 찍은 사진

마지막으로 저희가 인터뷰 과정에서 취재원으로 활용했던 WalkintoKorea와도 연계해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WalkintoKorea는 상술했듯 한국의 관광문화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강대훈 대표는 대면 인터뷰 당시, 콘텐츠 제작 과정 전반에 관심을 보이며 향후 WalkintoKorea에 객원기자로써 포스팅을 해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영문 기사로 작성하여 WalkintoKorea 사이트에 기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WalkintoKorea가 타겟팅하는 독자층이 한국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인

만큼 콘텐츠의 배포 범위를 다소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강대훈 대표 스스로도 블로그 등 개인 SNS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만큼, WalkintoKorea 측과 연계하여 오프라인 캠페인 등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모든 콘텐츠는 단순히 콘텐츠의 제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다수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완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작한 콘텐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함께 전달될 수 있도록 영상 활용과 카드뉴스 제작, 매체 기고 외에도 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감

이상훈

언론사 팩트체크는 많이 봤지만, 직접 주체가 되어 팩트체크에 참여해 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 과정이 마냥 쉽고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취재 결과물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기쁨도 커졌습니다. 특히 여러 전문가 분들께 인터뷰 요청을 들리고, 실제 인터뷰가 성사되어 취재의 깊이가 더해질 때, 엄청난 뿌듯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참가한 팀원과 저 모두 기사를 꿈꾸는데, 이번 팩트체크 체커톤 대회를 계기로, 언론인이 갖춰야 할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더욱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이번 체커톤을 통해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정창경

아이템 발굴부터 실제 취재, 그리고 콘텐츠 기획까지 많은 과정을 경험해보면서, 팩트체크가 매우 의미 있고 책임감이 필요한 과정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배워나가는 재미와 보람도 있었고, 문제의식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취재에 대한 열정도 더욱 커졌습니다. 최근 SNU 팩트체크센터에서 선발하는 인턴 과정에도 지원해 합격했는데, 이번 체커톤에서의 경험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팩트체크 활동을 수행해나가겠습니다.